

# 청주 고교 학생 흥기 난동... 광주·전남은 안전한가?

지난해 6월 광주 북구서 흥기 사건 인력지원·프로그램 등 제도는 충분 "징후 있었을 것...가정·학교 소통 必" 청소년 전문 심리 치료 시설 확대를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이성 문제로 상담하는 과정에서 흥기를 휘둘러 교직원 등 5명이 다친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할 학교 안전 대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교육청 등 지역 교육기관 관계자들은 다양한 예방책이 마련돼 있지만 직접적인 심리치료 정책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8일 오전 8시 36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3학년 A(18)군이 특수학급 교실과 복도에서 교직원들을 상대로 흥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교장과 환경실무사, 행정실 직원 등 3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교직원 1명은 경상을 입었고, 도주 과정에서 A군과 부딪힌 행인 2명도 다쳤다.

경찰은 인근 호수에 몸을 던진 A군을 구조해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그의 가방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흥기 외에 추가로 3개의 흥기가 더 발견됐다. A군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였다. 지난해까지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다가 올해부터 상대가 호전돼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었다. 범

행은 일반교실 수업을 마친 뒤 특수교실로 이동해 이성 문제 관련 상담을 받던 중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도 학교 내 흥기 난동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북구 한 중 학교에서 학생 B(16)군이 수업 중에 체험학습 수련회를 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흥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 다행히 교사와 학생 등의 제지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커터칼을 들고 겁박하는 등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B군은 지적장애가 있었고,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특수학교로 전학이 예정돼 있었다.

교육 당국은 학교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생 흥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이같은 사건의 상당수가 심리·정신적 문제를 지

닌 학생들과 관련된 만큼 학생 배치 조정과 인력 지원, 행동중재 프로그램, 부모 대상 상담·교육 등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사고가 되풀이되면서 특수교육 정책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서 간 협력 대응 등 다양한 예방책을 마련해두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특수교육법이 정신질환을 특수교육 대상 범주에 포함하지 않아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교육청이 조선포병원과 함께 운영하는 병원형 위(Wee)센터 등 직접적인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정책이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정과 학교 간의 소통"이라며 "가

정 또는 학교에서 학생의 징후를 파악했을 때, 두 주체간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가정에서는 이 또한 지켜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광주의 한 특수학교 교사는 "사고 예방 시스템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모 동의서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즉각적인 치료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발적인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가정과 학교가 협력해 지속적인 약물 등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부족한 청소년 전문 심리 치료 시설 및 병실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 광주 시민사회단체 "한국에너지공대 예산 삭감 철회를"

정부출연금 올해 100억 반토막 "대학 연구 경쟁력 약화 우려"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INTECH)의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6개 시민단체는 29일 연대성명을 내고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예산 삭감 조치는 광주·전남 지역 전체의 미래와 국가 균형발전의 의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광주·전남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인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지역 과학기술 생태계를 고사시키려는 시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교 당시 250억원이었던 정부출연금이 지난해 200억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100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며 "연구동 건설이 완료돼도 핵심 연구 장비 도입과 인프라 구축이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대학의 연구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정부는 부당한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 약속했던 연 200억원 이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라"며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과 연구 활동을 보장하고 표적감사, 총장 해임 압박 등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승우 기자



광주공감연대·광주 전남비상시국회의는 29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YMCA 2층 백제실에서 '한국 정치의 위기와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사회대개혁 청년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승우 기자

## 中 국적 10대 피싱 수거책, 택시기사 신고에 '덜미'

보성 벌교서 1200만원 편취 혐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한 중국 국적 10대 남성이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영암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10대 A군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8일 보이스피싱조직의 지시에 따라 전라남도 보성 벌교읍에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2차 범행을 위해 택시를 타고 영암 신북면으로 이동하던 중 그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았다. 범죄에 연루돼 있는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며, 택시기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영암=한교진 기자

## 광주 도시철도 공사현장서 상수도관 누수 '복구 완료'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상수도관 누수가 발생해 관계당국이 복구작업을 완료했다.

29일 서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치평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 수돗물 약 300톤이 누수해 나왔다.

새벽시간 대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단수된 가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관 이음새가 어긋나면서 누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오전 9시35분께 복구작업을 완료하고, 오후 2시30분께 수로 확보를 마무리했다.

윤준명 기자

## 광주 송정동 상가서 불... 인명피해 없어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송정5일시장 인근 생활용품 상점에서 불이 나 29분 만에 진화됐다.

29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9분께 광산구 송정시장 인근 생활용품점에서 불이 났다. "불꽃이 보인다"라는

신고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27대 인원79명을 동원해 오전 10시 8분께 불을 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으나 손님 4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정준 기자

## 광주·전남 찾은 공감버스... "청년 중심의 사회변화를"

전국 단위 시민단체서 순회토론 '사회개혁'... 청년주도 토론 진행 "청년들과 함께 공감있는 사회로"

사회적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 청년과 시민들이 전국을 순회하는 '공감버스'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광주·전남 지역을 찾았다. 이들은 다양한 세대와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 변화의 움직임을 점차 확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29일 시민단체 공감연대와 전국비상시국회의가 기획하고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후원하는 '청년공감버스' 제2호가 대구와 울산에 이어 광주광역시를 찾았다.

공감버스는 청년과 시민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개혁의 중심 세력으로 나서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대화를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여정에는 이부영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김태일·이영기 공감연대 공동상임대표를 비롯해 각지 청년 등 20여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 동구 금남로 YMCA 2층 백제실에서 '사회대개혁 청년토론회'를 열고 '한국 정치의 위기와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

눴다. 토론회에는 김태진 광주청년센터장을 비롯해 지역 청년들이 참여해 현실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과 청년 세대의 역할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지금의 정치는 청년들의 외면이 낳은 결과'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김태진 센터장은 "청년 관련 법안의 가결율은 일반 법안 가결율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유권자의 30%에 이르는 청년들의 바람이 정치 영역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않는 것"이라며 "정치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청년 세대가 사회의 주축이 돼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20·30세대 극우화의 원인과 과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진보 성향을 보이는 정당마저도 청년과 소외계층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감으로 젊은 세대가 보수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새로운 지도자는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해줄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전일빌딩245 4층 시민마루에서 '한반도대격변기의 사회대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논제를 놓고 강연과 함께 시민사회 토론회가 진행됐다. 공감연대 공동상임대표이기도 한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

번 토론회에는 전국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광주비상행동 등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등 70여명이 참석해 사회 개혁의 방향성과 실천 전략을 놓고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강연에 나선 이부영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은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가의 존망이 달린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대전환기를 맞아 평화와 통합이라는 원칙 아래 장기적인 국가 비전과 개혁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영태 명예교수, 김태진 센터장, 위경종 광주비상행동 사회대개혁 위원장을 태운 공감버스는 30일 오전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목포대학교로 이동해 '전남의 청년이 말하는 좋은 사회'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버스는 앞으로 제5호까지 전국 순회를 이어간다.

이영기 공감연대 공동상임대표는 "12·3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사회대개혁이 필요함을 실감했다"며 "청년공감버스는 우리 사회의 주역인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해법을 함께 모색해 개혁을 실현해나가고자 한다. 공감이 살아 있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윤준명·정승우 기자